

與 특검추천위원 2명 유가족 동의 받기로

여야, 세월호특별법 제합의 ... 꼭 막힌 정국에 숨통

유가족 "수용 못한다" 재협상 요구...野 추인 불투명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 합의, 꼭 막힌 정국에 숨통을 트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재합의했다.

이 회동 직후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진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이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4인을 여야가 각각 2인씩 추천하되, 여당 몫은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동의하

에 인사를 추천기로 했다. 특검 추천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만큼 4인의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야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야가 앞서 합의한 본 그대로 여야가 5명씩, '대법원+대한변협' 4명, 유가족 3명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진상조사위에서 특검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 세월호 특검 임명 절차

추천위원 7명 구성

- 여당 몫 2명(유가족 동의 얻어 추천)
- 야당 몫 2명 • 대한변호사협회장
- 법무부 차관 • 법원행정처장

2명 추천

대통령이 1명 임명

청문회 증인 채택 건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를 양당 간 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 양당에서 모두 추진되더라도 법안 조문 작업을 거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8월 임시국회나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이 19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여야 합의안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지하철 2호선 저심도방식 바뀔까

민선 6기 TF회의 ... 예산절감 위해 고가·트램 방식도 검토

광주지하철 2호선 건설방법 비교

종류	경량전철(저심도)	경량전철(고가)	노면전차(트램)
속도	도로 4~9m 굴착 지하공간 운행 30~40km/h	도로 중앙 전용고가 위 운행 30~40km/h	노면에 2~4개 차로 이용 10~15km/h
장점	• 지하 전용선로 이용으로 도로교 통과 충돌 없음 • 무인 자동화시스템 적용 가능	• 지하 건설방식에 비해 경제적 • 무인 자동화시스템 적용 가능	• 가장 경제적인 경량전철 시스템 • 모든 동선이 지상에서 이루어져 이용객 접근성이 가장 양호
단점	• 별도 지하 지장물 처리대책 필요 • 도로굴착 공사중 교통혼잡 우려 • 도로선형에 따른 급곡선 형성	• 소음, 진동 및 도시미관 저해 • 차로 점유 노면교통 악영향 우려 • 노선 인근지역 일조권 침해 발생	• 교차로 등에서 사고위험 상존 • 2~4차로 노면교통 정체 유발 • 전차선 설치시 도시미관 저해
건설비	약 500~600억원	약 450~500억원	약 250~300억원

연내 확정 못하면 용역비 반납

민선 6기 광주시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건설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기술자문 TF팀은 20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저심도, 고가전철, 노면전차(트램)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일부 TF위원은 구간별로 최적의 방식을 섞어 건설하자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저심도 방식을 수정할 경우 정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6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고민이다. 특히 정부가 광주시의 재검토를 트집잡아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국비(52억원) 지급을 늦추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시는 건설비가 대폭 낮춰진다면 건설객치는 낮아져도 된다는 입장인 3가지 안을 중심으로 예산절감 방식을 찾는 일이 TF팀의 핵심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가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 확정해 놓은 저심도 방식은 지하 4~9m만 파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시는 이 방식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41.7km구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저심도 방식은 시속 30~40km로 속도가 일정하며, 지상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강점이 있다. 건설비도 km당 500억~600억원으로 기존 지하철(km당 1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통신케이블이나 상·하수관거 등 지장물이 많거나 지반이 약하면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행히 광주는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전체 구간 중 90%가 넘는 곳에서 저심도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도시철도 TF위원으로 참여한 이안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심도의 관점에서 보면 광주는 복합은 땅이다. 타지역은 저심도를 하고 싶어도 지장물이 많아 일부 구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상고가 방식은 건설비는 km당 450~500억원대로 저심도보다 저렴하다. 부산 4호선 등 대부분의 경량전철이 이 방식을 적용했다. 광주시도 애초 고가방식을 선택했으나 민선 5기때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저심도로 전환했다.

트램은 도로중앙 2~4개 차로를 전차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km당 250억원으로 가장 경제적인 경량전철로 꼽힌다. 하지만 시속 10~15km로 저속이며 교차로 사고 위험, 도로점용 과다에 따른 차량정체 유발 등의 단점이 있다. 강설이나 강우 등 기상 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날 TF회의는 구간별로 최적의 방식을 섞어 건설하자는 의견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저심도 방식을 수정할 경우 정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6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고민이다. 특히 정부가 광주시의 재검토를 트집잡아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국비(52억원) 지급을 늦추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시는 건설비가 대폭 낮춰진다면 건설객치는 낮아져도 된다는 입장인 3가지 안을 중심으로 예산절감 방식을 찾는 일이 TF팀의 핵심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가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 확정해 놓은 저심도 방식은 지하 4~9m만 파 전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시는 이 방식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41.7km구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저심도 방식은 시속 30~40km로 속도가 일정하며, 지상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강점이 있다. 건설비도 km당 500억~600억원으로 기존 지하철(km당 1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통신케이블이나 상·하수관거 등 지장물이 많거나 지반이 약하면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행히 광주는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전체 구간 중 90%가 넘는 곳에서 저심도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옥현 백일홍 '활짝' 광주·전남지역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연일 내리면서 19일 오후 담양 명옥현의 백일홍이 분홍색 꽃잎을 터뜨려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노태우, 취소된 '5·18 훈장' 반납 안했다

서훈 취소 11개 8년째 보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훈이 취소된 보국훈장 등 11개 훈장을 8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운 의원이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서훈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20%인 83개만이 환수 완료됐다.

서훈 취소 사유를 보면 12·12 또는 5·18 사건 관련 죄목으로 서훈이 취소된 경

우가 전체의 43.3%인 176개로 가장 많았고, 형법 등에 의한 징역 및 금고형(154개), 허위공적(25개), 친일행적(24개), 국가안전에 관한 죄(23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60~

1980년대에 받은 보국훈장 5개, 무공훈장 5개, 근정훈장 1개 등 총 11개 훈장의 서훈이 12·12와 5·18 관련죄로 지난 2006년 3월 취소됐으나 아직도 이들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나회 출신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도 각각 5개의 보국훈장과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신대학교 062)605-0956

한중 수교 22주년

韓國·中國
더 넓은 세상으로 함께 갈 오랜 친구

차이나 프렌들리 광주광역시